학부제의 현상과 전망

신 양 균
전북대 법학과 교수

1. 학부제 논의의 배경

1) 학과 중심의 대학 운영

1994년 7월을 기준으로 할 때 전국에는 131개 대학에 557개 종류의 학과가 있으며, 이는 지난 1975년 72개 대학에 236종의 학과가 있었던 것에 비하면 2배 이상의 증가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증가는 특히 이공계열에서 현저하며, 현재 557개 종류의 학과 가운데 이공계열이 231종을 차지하고 있다. 예컨대 이공계열의 대표적인 분야라 할 수 있는 기계공학분야를 보면, 기계공학과·기계설계학과·기계설계공학과·동력기계공학과·메카트로닉스공학과·산업기계공학과·생산기계공학과·생산자동화공학과·동력공학과·자동차공학과·자동화공학과·정밀기계공학과·제어기계공학과·제어계측공학과·항공기계공학과 등 15개 학과로 세분화되어 있다.

그간 학과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었던 것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첫째로 일반 국민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가 대학교육에 대한 마스터 플랜 없이 대학정원을 증원시켰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학과 신설을 별다른 제한 없이 허용해왔다. 이러한 학과 신설이 1980, 90년대의 산업인력 수요의 충족에도 어느 정도 기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둘째로 단위대학의 차원에서도 대학 자체의 양적 성장에 중점을 기울여왔을 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자신의 학문영역을 보다 확실히 세우기 위하여 새로운 학과 개설을 요구해 왔고, 이러한 학과 신설과 이를 통한 정원의 증가가 특히 대학 재정에서 등록금 증가를 통한 재원확보에도 기여해온 것이 사실이다. 셋째로 오랫 동안 일정수의 학과 설립이 종합대학 인가를 위한 조건

이 되어 인가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학과 신설이 지속되어 왔으며,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교수정원 확보나 각종 보직수당 혜택 범위의 확대로 이용되어온 측면이 적지 않다.

2) 학과 통합을 위한 논의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근자에 들어와 학과 중심의 대학 운영이 가지는 문제점들이 일부에서 신중하면서도 다양하게 제기되었고, 교육부에서도 1994년 7월 '학과 통합으로의 정책대전환 추진계획'을 통하여 학과 통합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어서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안에서도 대학교육과 관련하여 ① 대학모형의 다양화·특성화, ② 대학원교육의 강화, ③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 ④ 대학 교육과정 혁신 등 네 분야에 대한 개혁방안이 마련되었다. 여기서 다양한 대학모형을 현실화하고, 대학원교육을 강화하며,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전제로서 학과 통합 내지 계열화가 구체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교육부의 학과 통합 추진계획이 발표된 지 1년여 만에 대부분의 국립대학을 포함한 60개 대학 이상에서 학부제를 중심으로 한 학과 통합이 이루어져 745개 학과가 246개 학과로 축소 조정되었다는 보도도 있다. 이전에도 학과 통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다가 교육부의 추진계획이 발표되자 1년 만에 그러한 급속한 학과 통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로 학과 통합이라는 개혁방안이 대학 자율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교육부의 정책추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로 단위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과 통합이 학부제의 취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채 '학과 통합=학부제'라는 도식화된 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2. 학부제의 도입을 둘러싼 현실

현재 각 대학에서 논의하고 있는 학부제의 내용을 보면 종래의 단과대학 개념을 대체하면서 신입생 모집을 계열화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학과를 통합하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지만 종래 전통적인 학과 모델을 출발점으로 삼을 때 하나의 학과에 해당할 수 개의 학과들이 학과 통합계획에 따라 학부라는 이름으로 통합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학과 통합이지 학부제 실시라고 보기 어렵다.

학부제는 그 내실이 중요하다. 즉, 학부제는 학문영역의 통합이라는 명제 아래 단일분야가 아닌 관련 학문분야를 학부라는 단위로 묶어 학문분야 상호간의 교류를 증진하고 교양교육을 강화하는 제도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학부제는 대학이 종래의 타성적인 대학 운영에서 벗어나 대학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 즉 대학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학생들의 다양한 전공선택을 보장하는 방안으로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부제의 근본 취지가 제대로 확산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부제 논의가 미래지향적인 인재양성과 학문 연구라는 대학의 이념에 부합하는 자율적인 조직 개편의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1) 특성 있는 대학 모델과 학부제

5·31 교육개혁안을 기본틀로 할 때 학부제는 복수전공제 실시를 통한 교육과정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는 제도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만 종래와 같은 장기적인 전망 없는 교세

확장주의나 백화점식 대학 경영을 지양하고 단위대학별로 적합한 발전계획을 설정하지 않은 채 단지 교육과정의 외형적 틀만 학부제로 변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대학 현실은 모든 단위대학이 학문연구, 교양습득, 산업인력 양성, 관리자 배출이라는 다양한 과제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과제를 단위대학들이 분업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단위대학이 이러한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해 온 지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결과 교수들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도 이에 익숙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바람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특히 그러한 개편작업은 정부의 교육개혁 의지나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요청만으로 쉽사리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우리의 고민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과정의 효율성을 위해 학부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오히려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한편, 교육개혁안이 제시하는 대학모형, 즉 학문연구중심대학·교양중심대학·전문가중심대학·관리중심대학과 같은 대학모형이라는 것이 단위대학이 다른 대학이나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의 대학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지킬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라면(교육개혁위원회의 의도는 그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다양한 모델 제시 자체가 경쟁을 통한 동기유발이라는 경제논리 내지 자본논리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학부제는 학사과정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어떤 대학모형을 설정하는가에 따라 학사과정의 운영방식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각 대학이 장차 고유한 대학모델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모든 대학이 학사과정을 학부제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현재 산업중심대학(전문가중심대학)을 표방하거나 언어영역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어학분야를 발전전략으로 삼고 있는 일부 대학이 실제로 학부제 도입을 서두르는 현상은 교육부의 바람몰이식 학부제 방침에 편승하거나 학부제의 근본취지를 알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학부제는 학생들에게 학사과정에서 폭넓은 교양과 다양한 전공 선택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로서 일응 교양중심대학에서 주된 역할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규모가 큰 단위대학의 경우에 현재 특정 연구분야에 대한 연구자 양성에 중점을 두는 학문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학부제 실시를 검토할 만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학부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수와 학생의 질적 수준과 대학 재정 등을 고려하여 학문연구중심대학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학원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들이 앞다투어 학부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교육부가 대학평가인정제를 통하여 대학의 군살빼기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고 차등적인 예산지원, 교수정원 조정 등을 통하여 학과 통합을 유도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학부제에 대한 논의는 학부제라는 제도 자체의 당부를 떠나 각 대학들이 대학의 발전방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학과 통합을 위한 방편으로 학부제를 성급하게 도입하려는 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복수전공제와 학부제

학부제는 개별 학부에 속한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중요한 특징이 있고, 이 점에서 복수전공제가 학부제의 주된 골자라고 할 수 있다. 5·31 교육개혁안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제시한 복수전공제도와 이를 위한 이수학점 최소화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전공선택의 융통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수능성적에 따라 즉흥적으로 학과를 선택하게 되는 폐단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복수전공제의 실시는 현재 우리 대학의 현실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인기전공 내지 사회적 수요가 큰 전공에 학생들이 몰려 대학 내에서 학문의 균형있는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어학계열의 경우, 실용언어로서의 성격이 강한 분야에 학생들이 집중되어 다른 어학분야가 유명무실화될 염려가 적지 않다. 즉, 복수전공제는 사회적 수요가 큰 전공분야가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주변학과 죽이기'에 기여하는 측면을 안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록 학사과정에서 교양 중심의 포괄적인 전문지식만 이수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수 개의 전공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부담으로 인하여 최소한의 전공과정마저도 성공적으로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날 것이다. 더욱이 각 대학에서 영어회화나 컴퓨터 등의 분야에 대해 학생들에게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서 수 개의 전공에 대한 이수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 의문스럽다. 오히려 다양한 전공선택의 가능성은 부전공 내지 교직 선택의 활성화를 통해 해소해 나가는 방향이 현실적으로 타당할는지도 모른다.

3) 대학원중심대학으로의 전환

학부제 내지 계열화가 전제로 하고 있는 또 한 가지 점은 개별 전공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은 대학원 과정을 통해 이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요원에 대한 훈련이나 학문연구자에 대한 교육은 대학원에서 담당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시한 다양한 대학모형을 전제로 한다면 현재의 많은 대학은 학문중심대학·교양중심대학·전문가중심대학·관리자중심대학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역적 특성이나 건학이념 등을 토대로 이러한 복합적 성격을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문중심대학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대학원중심 교육은 대학교육의 핵심이 되기 어려운 측면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대학발전사를 일별해 보더라도 인위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대학이 고유한 모델을 새롭게 창출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고, 오랜 전통과 학문적 계승을 통해 독자적인 대학모형을 형성해 왔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학원중심대학은 대학 자체가 대학원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투자에 혁신을 가져올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이 재정의 영세함을 면치 못하고 있고 과감한 시설투자나 연구투자를 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학부제 실시 자체를 위해 소요되는 투자 이외에 대학원교육을 위해 투자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학문 자체의 발전이 장기적인 전망 가운데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대학원교육으로의 전환이라는 것도 단기간의 조직개편이나 투자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대학원중심대학의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바람직한 학사과정을 위해 학부제의 도입을 검토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학부제의 실시가 대학원중심대학의 조기 실현을 약속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3. 학부제 도입의 문제점

1) 제도 자체의 문제점

세계화를 내세우는 현 정부의 태도는 사회 각 분야에 대한 경제논리의 적용에 골몰하고 있는데, 이 점은 교육분야에서도 다르지 않다. 그 동안 대학이 대학교육에 대한 넘치는 수요에 만족하면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학의 현실은 안으로는 교육개혁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고, 밖으로는 교육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절실한 과제를 안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부제는 그 자체가 이러한 경쟁논리 내지 자본논리를 바탕에 깔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학부제를 실시하게 되면 학부 내의 수 개의 전공 가운데 학생들의 현실적 필요에 부합하지 못하는 전공은 결과적으로 사장될 수밖에 없어 현실수요가 없는 학문분야는 대학 공간에서 도태의 위기를 맞게 된다. 이 점은 동일 전공 내에서도 사회적 수요가 많은 분야와 그렇지 못한 분야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다. 또한 학부제의 주된 내용이 되는 복수전공은 학생들간의 불필요한 경쟁의식을 유발하고 학점 위주의 대학교육을 가중시킴으로써 생활공동체로서의 대학의 모습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다. 즉, 학부제의 실시는 대학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연구나 수업에 매달리게 하고 대학 운영을 외면하게 함으로써 대학의 효율성이나 수월성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육과정의 효율화보다는 오히려 경영의 합리화라는 차원에서 학부제 문제에 접근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즉, 사학의 경우에 학사관리나 교무행정의 면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고, 보직 축소와 통합강의를 통한 비용 절감 그리고 인건비와 시설비 축소 등을 통해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대학들이 과감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사학 운영의 어려움은 그 동안 대학 자체의 방만한 운영에도 책임이 없지 않지만, 사학재단들이 건전한 사학운영을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투자를 게을리하고 오히려 사학으로부터 이득을 취하려고 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2) 교육부 지원정책의 문제점

교육부는 단위대학의 학과 통합 및 학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과 통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자구지원비와 교수 및 학생정원 확대 등의 지원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정책은 교육개혁위원회의 5·31 교육개혁안과 교육부의 대학교육 개혁정책에서 일관되게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서, 교육여건이 일정 수준을 넘는 대학에 대해 그 능력에 따라 연구지원금과 인재양성지원금 등 재정지원을 우선하여 차등 지급한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정책이 학과 통합에 중요한 자극제가 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지만,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 교육부의 지원계획에 영합하는 방향으로 학부제가 왜곡 수용될 염려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교육부의 학과통합안이 발표된 이후 각 대학은 거의 예외 없이 학부제 실시를 검토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대학들이 이 제도를 실적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는 비난이 적지 않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단위대학간에 몇 개의 학과가 통합하여 몇 개의 학부를 만들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경쟁적인 학부제 도입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실질적인 학과 통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통합학과의 명칭으로 학부라는 명칭을 강요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아직 종래의 학과모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전공분야들이 상당수 남아 있는 단위대학에서 학부제의 전면 실시를 전제로 하는 (복수전공제의 전제인) 최소전공인정학점제도를 모든 학과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학칙개정을 하는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교육부가 경쟁의 논리에 입각하여 제시한 지원정책은 왜곡된 경쟁의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학부제나 계열화 시도가 대학 발전의 차원보다는 교육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지원정책이 가져오는 불합리한 결과의 문제이다. 대학별로 보면 그 동안 학과를 세분화했던 대학일수록 학과 통합의 여지가 크고, 따라서 통합에 따른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은 단위대학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위대학 내에서 학과가 세분되어 있는 단과대학의 경우에 학과 통합 내지 학부제 시행의 가능성이 크고, 이는 종래 학과 세분화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이공계열에서 학부제 도입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반증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교육부의 학과 통합정책은 인문사회계열에 비하여 이공계열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는 결과로 될 뿐만 아니라, 과거 학과 세분화를 통하여 신설학과의 지원을 받았던 학과들이 다시 학과 통합을 통하여 새로운 지원을 받게 된다는 웃지 못할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실제로 각 대학에서는 학과 통합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없는 학과에서는 교육부나 대학당국의 이러한 차등 지원 현실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형편이다.

4. 전망과 과제

오늘날 대학은 외부로부터 쏟아지는 개혁 요구에 직면하여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개혁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외부의 강압이 아니라 내부의 절실한 필요성이 있을 때만이 실질적인 개혁이 가능하다. 특히 교육분야에서의 개혁은 정부의 개혁의지나 교육부의 개혁방안 수립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 동안 대학이 타율과 순치에 익숙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현실이 정부의 당근과 채찍만으로 극복되리라는 기대는 대학에 잠재된 특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에 잠재하고 있는 역량을 일구어내고 대학의 자성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대학의 여러 분야에서 자율성을 회복하는 데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학부제에 대한 논의도 이러한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학부제라는 방안 자체가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의 수월성을 높이는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대학 내의 충분한 개방적 논의과정을 통해 학부제 또는 다른 조직 개편 방안을 확립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는 일이 본질적인 과제이다.

장기적인 전망에서 볼 때,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학부제 도입이 1960, 70년대의 대학 구조 개편이나 계열화 시도에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인가? 개인적으로 그 전망이 매우 어둡다고 생각한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단위대학들로 하여금 대학 조직개편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유도하고 예산지원으로 대학 재정의 부분적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교육부 자체가 학부제의 틀만을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단위대학에서 조직개편 논의에 대한 다양한 논의 가능성을 사실상 봉쇄할 뿐

만 아니라 대학 운영에 대한 자율적 의사형성의 가능성을 가로막는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화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최근 학부제 도입과 관련하여 많은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성과 올리기에 급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거대한 자본의 논리에 휘말린 대학의 초라한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나만의 우려는 아닐 것이다. 수월성과 효율성에만 매달려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적인 운영을 사실상 가로막는 교육부의 과행적 유인책을 대학은 극복해야 한다. 대학이 바뀌어야 한다는 명제에는 물론 공감한다. 그러나 무조건 변화하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해 대학이 스스로 심각하게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진정한 의미의 개혁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

신양균/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북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육사 법학과 교관, 서강대 법학과 교류교수, 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교육법개정특위 위원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 『신고 형사정책』 등이 있고, "정범과 공범의 구별", "결과적 가중범의 불법구조", "형법상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에 관한 연구"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